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2005. 10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2005. 10

김영윤 (북한경제연구센터 소장)

이 석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손기용 (남북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조 민 (남북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서재진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최수영 (북한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요 약

- 남북간 전쟁이나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가 발생할 경우, 현 남한 1인당 GDP를 30~40%까지 하락시키는 동시에 지금까지 성취한 경제적 토대 위의 모든 사회적 장치들을 대혼란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큼.
- 이상과 같은 부담 발생 가능성은 적극 억지되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처를 평화비용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음.

1. 평화비용의 의미와 구조

- 평화비용은 통일 이전 한반도 평화 유지와 정착을 위해 지불하거나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을 총칭
 - 한반도 전쟁 위기 억지 및 해소,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불하는 모든 형태의 비용으로서 남북경협 및 대북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시킬 수 있음.
- 평화비용은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당사국간 합의에 따른 지출일 경우, 사안의 시급성과 지출의 당위적 성격과 함께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는 사전적(事前的) 비용이자 수익적 성격을 띤다.
- 평화비용은 지불 주체 및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나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재정지출)으로 한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비용으로 구체화할 수 있음.

- 평화정착(안보환경개선) 비용: 평화정착을 위한 지출
- 북한경제 안정화 비용: 인도적 지원 및 유·무상 차관 등
- 남북경협 활성화 비용: 민간기업의 대북 진출 촉진 및 북한 내 사업여건 개선
- 통일대비 경제투자 비용: 개발지원

○ 분단비용 및 통일비용과의 비교

- 분단비용: 한반도 분단의 결과인 남북간 대결과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무형의 지출성 비용
- 통일비용: 통일에 따른 남북한간 경제격차 해소 및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데 소요되는 체제통합비용(위기관리비용, 경제재건비용, 제도통합비용, 사회보장비용 등)
- 평화비용: 투자 성격을 지닌 일종의 사회자본(분단비용 감소, 통일편익 증대)

2. 평화비용의 실익

가. 경제적 실익

○ 평화비용은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

- 정치·군사적 실익: 국가이미지 제고,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 및 동북아 다자안보 실현
- 경제적 실익: 국가 신인도 증대, 국제자본의 대북투자 촉진 등
- 사회·문화적 실익: 냉전문화 극복, 민족자존 회복, 동북아 중심 국가 위상 제고, 민족공동체 회복

<국가 신인도 제고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 평화비용의 지출로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실익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내지 ‘컨트리 리스크’ 감소로 인한 국가 신인도 증대와 그에 따른 제반 국가 부가가치의 창출임.
 - 해외자금 조달비용 절감, 국가자산가치 증대, 해외자금유입 규모의 증대 및 형태 개선 등의 효과 창출 등

<대북 투자자산 보호>

- 남북평화가 위기에 직면할 경우, 남한의 대북 투자자산이 동결·무효화될 가능성을 배제시킴으로써 대북 투자자산을 보유한 남한 경제주체들의 재정적 파탄을 방지

<투자수익제고>

- 장단기 투자수익의 극대화 효과
 - 단기: 남북경협 제도화를 통한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 증대
 - 장기: 북한시장 선점효과 및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방지

<통일비용의 경감>

- 통일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先투자하고 시기적으로 분산,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통일이전 남북한간 경제적, 제도적 격차를 줄임으로써 전체 통일비용 규모 자체를 줄이는 효과
 - 통일비용 절감 수단 및 경로: 대북 자산 취득(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남북한 경제 및 제도적 격차 해소

<신규 투자기회 창출>

- 평화비용의 지불을 통해 ‘북한특수’ 효과를 기대
 - 우리 경제의 새로운 투자처 제공
 - 북한을 거점으로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간 경제협력의 본격적 추진: 동북아경제중심으로 부상하는 촉매로 작용

나. 비경제적 실익

- 국가이미지 제고
 - 국제사회에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
 -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천하는 모습 부각
-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
- 남북한 군비통제의 실행
 - 평화비용 지출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은 남북 군비통제의 출발점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실현
- 북한주민의 대남한 인식 전환
- 남북 이질성 극복

- 대남 의존도 심화
 - 북한 주민의 대남 동포애 부각

3. 독일사례: 평화비용과 독일통일

- 독일 통일은 동서독간 장기적 교류협력의 산물임.
- 동서독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요인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서독의 대동독 지원이었음.
 - 서독의 대동독 지원(대규모 차관, 동독 정치범 석방 등)이 동서독간의 안정과 서독에 대한 동독 주민의 인식을 전환시킴.
- 서독의 대동독 지원은 통일 시점까지 연평균 59억 마르크(서독 주민 1인당 매년 50달러), 서독 GDP의 2.9%(통일 직전 1989년)에 달했음.
 - 남한의 대북 지원은 GDP의 0.017%(2000년), 정부예산의 약 0.1%, 남한 주민 1인당 연 2.3달러

4. 정책 제언

-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정부가 제시한 대북 송전을 통한 에너지 지원은 전형적인 평화비용의 한 형태
 - 대북 에너지 지원에 따르는 북한의 산업생산, 남북한 경험축진 등 남북한의 생산 및 고용에 주는 효과는 투자금액의 15배 내지 20배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 국가 신인도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 증가, 주가 상승, 외자 조달, 금리 인하 효과 등

- 남한에는 남북경협 확대 등과 같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도래,
대규모의 경제적 효과 발생을 기대

- 평화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원 마련 및 확충이 선행
되어야 함.
 - 재원 마련 및 확충 방안: 남북협력기금의 확대, 예산의 일정 비
율을 평화비용으로 전환
 - 평화비용 지불의 우선순위: 대북 송전 등 북한 경제 관련 평화
비용의 지불은 효과 측면에서 우선 고려 사안

목 차

I. 문제제기	1
II. 평화비용의 의미와 구조	3
1. 평화비용의 의미	3
가. 개념	3
나. 성격	4
2. 평화비용의 구조	4
3. 분단비용 및 통일비용과의 비교	7
III. 평화비용의 실익	9
1. 경제적 효과	9
가. 국가 신인도 제고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10
나. 대북 투자자산 보호	11
다. 투자 수익 제고	12
라. 통일비용의 절감 및 부담 경감	12
마. 신규 투자기회 창출	13
2. 비경제적 효과	16
가. 정치·군사적 효과	16
나. 사회적 효과	18
IV. 평화비용과 독일 통일: 독일 사례의 시사점	20

V. 정책 제언 23

- 1. 대북 에너지 지원 관련 23
- 2. 향후 과제 23

<그림 1> 평화비용의 구조와 경제적 효과 15

I. 문제제기

- 남북한간 전쟁이나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파괴될 경우, 남한이 부담해야 할 경제·사회적 비용은 막대함.
 - 남북한간의 전쟁은 그것이 소규모 국지전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경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으며,
 - 특히, 전면전인 경우에는 남한의 거의 모든 지역이 50년대 한국 전쟁 직후의 폐허 상황으로 되돌아 갈 가능성이 큼.

- 남한 경제의 붕괴는 경제 주축을 이루는 대기업(삼성, 현대, LG, POSCO 등)과 우량기업들의 절대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자본의 철수는 물론, 생산기반의 대규모 해외이전으로 이어짐으로써 한국 경제는 한마디로 대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임.

-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 또한 현 남한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에 따라 추진될 통일은 현 남한 1인당 GDP를 30~40%까지 하락시킬 것이며,
 - GDP의 급속한 하락은 현재 이룩한 경제 토대 위의 사회경제적 장치들을 대혼란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큼.

- 이상과 같은 부담 발생 가능성은 적극 방지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처를 평화비용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임.

- 본 보고서는 평화비용 지출의 정당성을 북한 핵문제 해결과 직결된 대북 지원 문제에 접근·고찰함으로써 대국민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평화비용을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지출에 따르는 반대급부인 편익을 수반하는 비용으로 인식하여 제시

II. 평화비용의 의미와 구조

1. 평화비용의 의미

가. 개념

<협의적 개념>

- 평화비용은 통일 이전 한반도 평화 유지와 정착을 위해 지불하거나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을 총칭함.
- 본 평화비용의 범주에는 한반도 전쟁 위기 억지 및 해소,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불하는 모든 형태의 비용이 포함될 수 있음.

<광의적 개념>

- 남북경협 및 대북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비용의 일부에 포함시킬 수 있음.
 - 남북경협과 대북 지원 등에 지출되는 비용은 북한 내 온건파 및 경제테크노크라트의 입지를 강화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 분 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임.

나. 성격

<시급성 및 당위성>

- 평화비용은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당사국간 합의에 따른 지출일 경우, 사안의 시급성과 지출의 당위성을 견지할 경우가 있음.

<편익성>

- 평화비용은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는 사전적(事前的) 비용이자 수익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남북경협 및 대북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모성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비용으로서 통일을 위한 선(先)투자비용적 성격을 지님.
 - 특히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된 비용일 경우, 현재의 지출은 향후 통일에 따라 소요될 비용의 절감을 가져옴은 물론,
 - 통일이전 본 평화비용 지출을 통한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통일에 따른 비용 지출 규모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함.

2. 평화비용의 구조

- 평화비용은 지불 주체 및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
 - 지불 주체에 따라 정부와 민간, 성격에 따라 경제적 비용과 비경제적 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음.
- 평화비용을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재정지출)으로 한

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비용을 상정할 수 있음.

- 평화정착(안보환경개선) 비용
- 북한경제 안정화 비용
- 남북경협 활성화 비용
- 통일대비 경제투자 비용 등

<평화정착(안보환경개선) 비용>

- 정부가 남북한의 전쟁위기 해소 및 특수한 정치·안보적 이해관계 해결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
 - 북한 핵문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송환 등과 같은 남북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지원 비용
 -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이 동독에 제공했던 경제적 지원의 대다수는 이러한 형태였음.

<북한경제 안정화 비용>

- 북한경제의 침체 또는 갑작스런 붕괴로 인한 탈북자 발생,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증대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등 예기치 못한 부정적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에 제공되는 경제지원 비용
 - 인도적 지원: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식량, 비료, 의료품, 기초 생필품 등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 북한경제 안정화 자금 지원: 현재 지원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북한경제의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현물 차관이나 무상지원 비용
 - 국제사회의 대북경제개발 지원: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유도를

위해 정부가 지불보증이나 차관 주선 등으로 북한에 제공 가능한 경제지원

<남북경협 활성화 비용>

- 민간 기업의 대북 진출 촉진과 북한내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 대북 진출기업 또는 남북경협 관련 민간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자금지원 비용
 - 북한내 민간기업 사업환경 개선 비용: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북한 제도정비 지원, 대북 투자기업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북한 인프라 구축 지원, 북한 인적자원(노동력) 개발 및 교육 지원, 북한 관료 등의 시장경제 교육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통일대비 경제투자 비용>

- 향후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에 제공되는 일체의 개발지원 비용
- 정부가 주도하는 전방위적 북한 인프라 구축 등 개발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
 - 북한 내 우리 기업의 활동 지원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는 않음.
- 여타의 평화비용은 상당수가 북한에 의해 단기적으로 소비되는 측면이 강한 데 반해, 본 비용은 북한 내 물적 자산으로 구체화됨.

- 통일시 통일한국의 자산으로 귀속된다는 특징을 보유

3. 분단비용 및 통일비용과의 비교

<분단비용>

- 분단비용은 한반도 분단의 결과인 남북간 대결과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형·무형의 지출성 비용
 - 유형의 분단비용: 군사비, 이념 및 체제 유지비, 외교·행정비 등 분단 관리를 위해 직접 지불해야 하는 비용
 - 무형의 분단비용: 분단으로 인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 평화비용이 통일을 통해 대부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반해 분단비용은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자, 통일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소멸되는 소모적 비용임.
 - 분단이 해소된다면 유형의 분단비용 및 분단에 따른 무형의 기회비용은 부담하지 않아도 됨.

<통일비용>

- 통일비용은 통일에 따른 남북한간 격차 해소 및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데 소요되는 체제통합비용을 의미함.
- 통일비용은 남북한 경제력 격차 해소 및 경제통합비용, 정치·사회·문화적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 비용을 포

함함.

- 유형의 경제적 통일비용에는 위기관리비용, 경제재건비용, 제도 통합비용, 사회보장비용 등을 생각할 수 있음.
- 통일비용은 통일방식과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양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평화비용과 통일의 편익>

- 평화비용과 통일비용은 소모적 성격의 분단비용과는 달리 정부의 재정지출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투자 성격을 지닌 일종의 사회자본이라 할 수 있음.
 - 통일비용은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 성격의 비용, 즉 통일에 따른 편익의 증진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분단비용과는 그 성격이 다름.
- 통일에 따르는 편익은 분단비용의 해소 및 통일한국의 비전과 관련된 미래발생 편익을 포함함.
 - 경제적 통일편익: 남북한 지역의 분단비용의 소멸 및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르는 편익
 - 비경제적 통일편익: 분단해소로 인한 안보불안 및 전쟁위기 해소의 정치·군사적 편익,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비롯한 북한 지역주민의 인권·자유 신장의 인도적 편익, 학문·문화 발전과 관광·여가·문화서비스 기회향상 등의 사회·문화적 편익, 무한가치인 통일 미래재(未來財) 창출로 인한 편익 등

III. 평화비용의 실익

- 평화비용은 한반도에 평화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함으로써 이에 따른 실익을 예상할 수 있음.
 - 남북한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국방비 축소 등 분단비용 감소 효과 발생

- 평화비용 지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적인 포괄적 실익을 예상할 수 있음.
 - 정치·군사적 실익: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한 안보협력 가능성 증대
 - 경제적 실익: 북방경제 효과, 동북아 공동시장 창출, 국가 신인도 증대, 국제자본의 대북투자
 - 사회·문화적 실익: 냉전문화 극복, 민족자존 회복, 동북아 중심 국가 위상 제고, 민족공동체 회복 등

- 본 고에서는 경제적·비경제적 효과로 나누어 고찰함.
 -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확한 규모 파악은 기본전제와 가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본 고에서는 생략함.

1. 경제적 효과

- 평화비용은 대부분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투자적 성격의 자금지출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비록 대북 인도적 지원(예: 식량 생필품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멸하는 것이지만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무형의 분단비용 감소라는 편익을 수반하고 있음.

- 이러한 평화비용의 지출은 경제적 실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경제적 실익을 발생시킬 것임.
 - 경제적 실익과 관련해서는 국가 신인도 제고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대북 투자자산 보호 및 투자 수익 제고, 통일비용 절감, 신규 투자기회 창출 등을 들 수 있음.

가. 국가 신인도 제고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 남북한간 군사적 대치, 북한 핵문제 등과 같은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국제시장에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또는 한국의 ‘컨트리 리스크(국가 위험도)’를 형성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음.
 - 북한과 관련된 한국의 ‘컨트리 리스크’란 단순히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로 인한 한국의 대규모 통일비용 지출 가능성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
 - 시간이 지날수록 전자의 가능성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욱 중요한 한국의 ‘컨트리 리스크’ 항목이 되고 있음.
- 평화비용의 지출로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실익은 ‘컨트리 리스크’ 감소로 인한 국가 신인도 증대와 그에 따른 제반 국가 부가가치의 창출임.
 - 평화비용으로 지불하는 평화정착(안보환경개선) 비용과 북한경제 안정화 비용, 남북경협 활성화 비용 등과 같이 북한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이바지하는 모든 비용은 한국의 ‘컨트리 리스크’

를 감소시켜 국가 신인도를 제고시킴.

- 국가 신인도 증대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음.
 - 해외자금 조달비용 절감: 국가신용등급 상승에 따라 국제자금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차입비용 감소
 - 국가자산가치 증대: 국내외 증권시장에서의 한국 기업의 가치(주가) 상승에 따른 국가 자산가치 증대
 - 해외자금유입 규모의 증대 및 형태의 개선: '컨트리 리스크' 감소에 따른 해외투자자금의 증대, 단기투자자금보다 장기투자자금 유입의 활성화, 간접투자자금(증권부문)보다 직접투자자금(생산부문) 유입의 활성화 등

나. 대북 투자자산 보호

- 평화비용 지불에 따르는 또 다른 직접적 효과는 대북 투자자산 보호라 할 수 있음.
- 남한의 대북 투자(북한내 실물자산 취득 및 각종 사업권이나 인허가권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현대아산만 하더라도 8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등, 200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해 왔음.
- 남북간의 평화가 위기에 직면할 경우, 북한당국은 이러한 남한의 대북투자자산을 동결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등 극단적 조치들을 취할 개연성이 있으며,
 - 이 경우 대북투자자산을 보유한 남한의 경제주체들은 심각한

재정적 곤란에 처할 것임.

- 따라서 평화비용의 지불로 얻게 되는 가장 직접적 효과의 하나는 이러한 우리의 대북 투자자산에 대한 북한의 몰수 등과 같은 위협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다. 투자 수익 제고

- 평화비용의 지불은 기업의 대북 투자와 관련, 장단기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임.
- 단기적으로는 기업 활동과 관련된 북한 인프라의 정비, 북한 노동력의 교육·개발, 북한경제의 시장화 촉진에 따른 이익 및 남북경협 제도화를 통한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 증대 등의 실익 발생
-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북한내 활동 확대와 이미지 제고 등으로 인해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북한시장에 대한 선점효과,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방지 등을 통해 투자 수익 제고의 발판 마련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라. 통일비용의 절감 및 부담 경감

- 평화비용의 지불은 본질적으로 향후 통일시 지출되어야 하는 통일비용을 先투자하는 것임.
- 평화비용의 지출은 미래 우리 사회의 통일비용 지출을 시기적으로 분산해 그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발휘함.

- 동시에 통일 이전에 남북한간의 경제적, 제도적 격차를 줄어나감으로써 전체 통일비용 규모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 평화비용의 지불을 통한 통일비용 절감효과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나타날 것임.
 - 첫째, 대북 자산 취득효과임.
 - 북한지역에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통일 이전에 미리 건설함으로써 통일 시점에서 통일한국의 대북 자산 취득 효과 발생
 - 둘째, 남북한 제도격차 해소효과를 지님.
 - 통일 이전 북한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제반 제도를 점진적으로 한국의 제도와 통합시킴으로써 통일 이후 남북간 제도 통합 비용을 절감
 - 셋째, 남북한 경제격차 해소효과를 가져올 것임.
 - 통일 이전 북한의 경제개발을 통해 남북한의 경제격차를 해소해 나감으로써 통일한국이 북한지역에 대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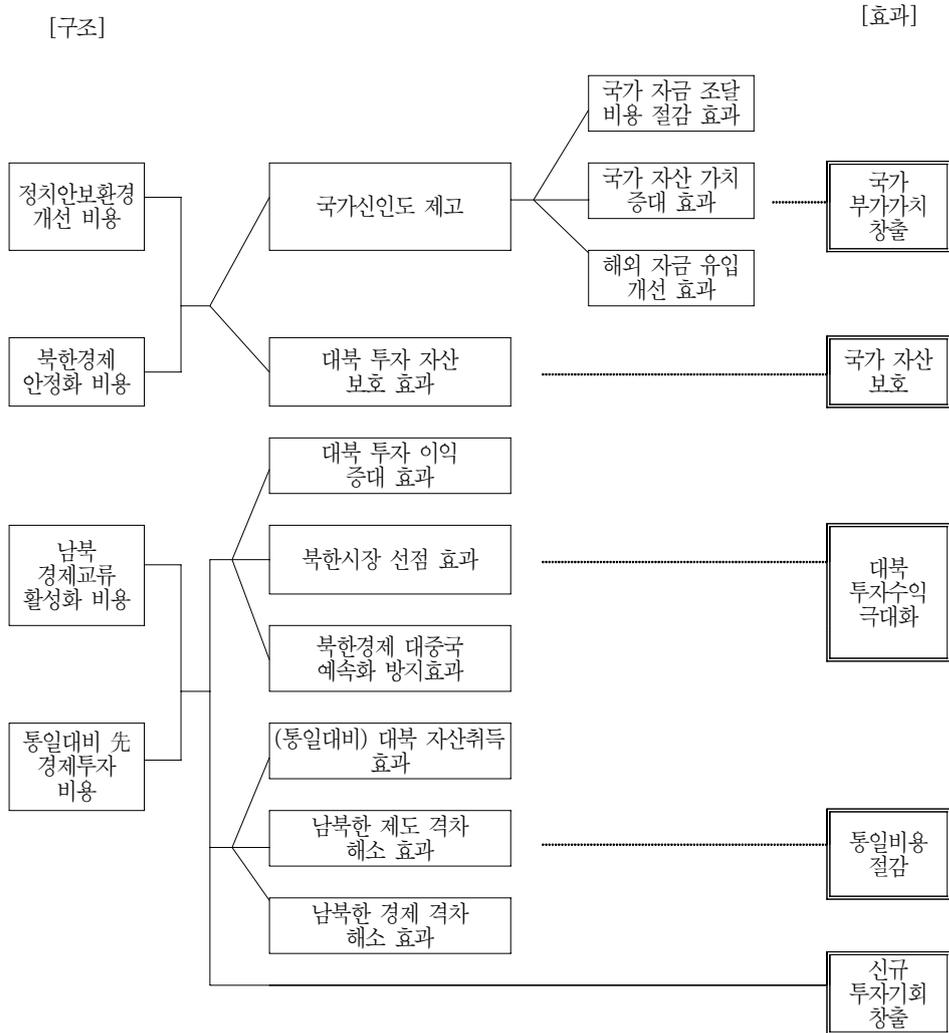
마. 신규 투자기회 창출

- 평화비용의 지불을 통해 ‘북한특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북한시장을 사실상 남한의 경제권 내에 포괄시킴으로써 투자기회의 축소와 투자수익의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새

로운 투자처를 제공해 주는 효과를 발휘함.

- 평화비용은 북방투자로 한반도에 북방경제 시대의 도래를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해 북한을 거점으로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간 새로운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 즉, 한반도는 동북아라는 새로운 활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동북아경제중심으로 부상하는 축매로 작용
- 이상의 효과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그림 1> 평화비용의 구조와 경제적 효과



2. 비경제적 효과

가. 정치·군사적 효과

- 평화비용의 정치·군사적 실익은 다음과 같음.

<국가이미지 제고>

- 북핵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이며, 핵문제로 인한 위기 발생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한국이 핵문제 해결방안으로 대북지원을 통한 평화적 해결의지를 확고하게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에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
- ‘평화’와 ‘공동 번영’을 국제사회에 실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이들 가치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호소할 수 있게 되었음.
 - 군비증강을 통한 군사적 대국화를 지향하는 국가들과 차별적 이미지를 부각시킴.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

- 대북 에너지 지원을 위한 평화비용 지출은 북핵문제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일축시킬 수 있음.
- 1차 북핵 위기시 미국이 대북 군사적 공격을 검토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핵무기 보유 선언 등으로 이어진 2차 북핵 위기 시에도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검토, 군사적 조치를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고조된 것이 사실임.

- 산티아고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2004년 12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LA에서 미국의 대북 무력행사 반대 원칙을 천명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였음.

<남북한 군비통제의 실행>

- 평화비용의 지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점진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남북 군비통제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국방장관급회담과 장성급회담, 군사실무회담 개최,
 -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합의(2003),
 -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조치 그리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상호 비방 중지조치 합의(2004)
- 평화비용 지출을 통한 핵문제의 해결은 진정한 의미에서 남북 군비통제의 출발점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실현>

- 평화비용 지출은 역내 국가들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지원에 동참케 하는 촉매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협력에도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 핵문제 해결을 계기로 역내 국가들이 정치, 군사 등 포괄적 측

면에서 안보협력을 위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임.

나. 사회적 효과

<북한주민의 대남한 인식 전환>

- 평화비용 지출은 남한 경제력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임.
 - 중국으로부터의 정보유입, 남한의 식량지원에 대한 사실 인지, 남한 방송을 청취하는 사람들의 경험 등에 의하여 북한에는 남한이 잘 산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 대북 에너지 지원 등은 남한의 전력 생산량이 북한의 전력수요를 감당할 만큼 많다는 사실을 북한주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됨.

<남북 이질성 극복>

- 남한의 대북 지원 사실이 북한 전체에 광범위하게 확산됨으로써 남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창출하게 될 것인바, 이는 남북 주민간의 이질성 극복에 기여할 것임.

<대남 의존도 심화>

- 대북 에너지 지원은 특히 북한의 전력문제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북한 간부와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의존심리를 심화시킬 것임.

- 남한의 에너지 지원이 없으면 과거와 같이 전기가 없이 어렵게 살던 고난의 행군 시절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될 것임.

- 북한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가 남한에서 제공하는 전기라는 사실을 인식할 경우, 북한의 간부든 일반주민이든 북한이 주도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될 것임.
-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의 대남 동포애를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임.

IV. 평화비용과 독일 통일: 독일 사례의 시사점

- 독일 통일은 동서독간 장기적 교류협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음.
 - 장기간 교류협력을 통해 동독 주민들은 서독이 부유하고 민주화된 사회임을 인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에 이르게 된 것임.
 - 동독 주민들이 통일을 요구함으로써 서독체제로의 편입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진 것임.

- 동서독간 교류협력은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통일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동서독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요인에는 대동독 정책의 전환, 협정체결과 준수 등 여러 요인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서독의 대동독 지원이었음.

- 서독의 대동독 지원은 동독의 외환위기 극복은 물론 안정적인 대서방 교류협력 추진에 크게 기여하였음.
 - 동서독간의 안정과 서독에 대한 동독 주민의 인식 전환을 가능케 했음.
 - 서독은 동독에 19억 5천만 마르크의 대규모 차관을 제공함과 아울러 동독 정치범 석방 등을 추진하였음.
 - 서독의 대동독 지원은 다양한 교류협력을 강화, 각종 협정체결을 가져오게 했으며, 협정을 통해 교류협력은 보다 굳건한 바탕을 확립할 수 있었음.

- 이런 점에서 통일 이전 서독의 대동독 지원은 평화비용 지출의 사례로 들 수 있음.
 - 서독은 1972년 '동방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1990년 통일 때까지 정부 차원에서 약 296억5,000만 마르크, 민간 차원에서 748억 마르크 등 총 1,044억5,000만 마르크(약 500억 달러/62조 4000억 원)를 동독에 지원하였음.
 - 서독의 대동독 지원은 통일 시점까지 연평균 59억 마르크(서독 주민 1인당 매년 50달러), 서독 GDP의 2.9%(통일 직전 1989년)에 달했음.

- 평화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통일 이후 막대한 통일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 독일은 통일 이후 매년 GDP의 4%(1인당 약 1,000유로) 정도를 구동독 지역으로 이전(이 중 60% 정도는 복지비용으로 동독에 지원)하고 있음.

- 한편 남한의 대북한 지원규모는 통일 이전 서독의 대동독 지원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남한의 대북 지원은 GDP의 0.017%(2000년), 정부예산의 약 0.1%, 남한 주민 1인당 연 2.3달러에 지나지 않고 있음.
 - 서독이 대동독 지원 규모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지원규모의 임계점으로 볼 경우 우리의 대북 지원은 향후 장기적으로 GDP로 환산 170배, 1인당 지원규모에서는 20배 정도 증가되어야 할 것임.

- 작금 국제기구가 한국에 대해 유엔 분담금 외 원조자금으로 GDP의 0.7%(약 5조원)를 대외원조자금으로 권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 국제회의가 권고하는 대외원조자금의 상당 부분을 한반도 평화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음.

V. 정책 제언

1. 대북 에너지 지원 관련

-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정부가 제시한 대북 송전을 통한 에너지 지원은 전형적인 평화비용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음.
 - 대북 에너지 지원비용으로 향후 9~13년간 6조 5천억 원~11조 원을 지출 예상(통일부)

- 대북 에너지 지원에 따르는 송전시설 및 전력생산 등 대규모 지출이 예상되나, 북한의 산업생산, 남북한 경협촉진 등 남북한의 생산 및 고용에 주는 효과는 투자금액의 15배 내지 20배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위험) 해소에 따르는 국가 신인도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 증가, 주가 상승, 외자 조달, 금리 인하 효과 등 발생
 - 특히 남한에는 남북경협 확대 등과 같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도래, 대규모의 경제적 효과 발생을 기대할 수 있음.

2. 향후 과제

- 정부는 평화비용의 의미와 지불에 따르는 실익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야 함.
 - 평화비용은 분단비용의 절감 및 향후 예상되는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등 비용지출과 함께 커다란 실익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려야 함.

- 특히 평화비용과 관련한 지출에서는 비용(Cost)보다는 실익(Benefit)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한 세미나, 지상좌담회, 포럼 등을 적극 개최
- 평화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원 마련 및 확충이 선행되어야 함.
 - 재원 마련 및 확충 방안: 남북협력기금의 확대, 정부 예산의 일정 비율을 평화비용으로 전환
 - 정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상한선으로 정해두고 특정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
- 평화비용의 효과(실익) 극대화를 위해 평화비용 지불의 우선순위를 정해 집행해야 할 것임.
 - 평화비용의 구조에 포함된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경제적, 비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함.
 - 대북 송전 등 북한경제(산업)의 재건과 관련된 평화비용의 지불은 효과측면에서 우선 고려될 수 있는 사안임.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근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현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변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변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1 (2003)	9,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2 (2003)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1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2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근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미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1)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김광역 외